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196
----------	------

발의연월일 : 2016. 11. 1.

발 의 자 : 정인화 · 홍문표 · 진선미  
주승용 · 황주홍 · 윤영일  
최도자 · 이용주 · 김중희  
송기석 · 이동섭 · 박준영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벌금형을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규정하는 경우 벌금액은 자유형의  
기간에 상응하도록 규정하여야 함.

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징역형에 상응한 벌금형을 분석한 자료를  
참고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개  
정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0조 및 제13조).

법률 제 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3천만원”을 “7천만원”으로 한다.

제13조 중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거짓된 정보를 전달하여 선박의 안전 운항을 위험하게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u>3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조(거짓 정보 전달죄) ----- ----- ----- ----- <u>7천만원</u> ----- -----.
제13조(협박죄) 다른 사람의 권리를 방해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제5조제1항·제2항, 제7조 또는 제8조의 죄를 범하여 운항 중인 선박 또는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게 할 것이라고 고지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u>2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3조(협박죄) ----- ----- ----- ----- ----- ----- ----- ----- ----- <u>5천만원</u> ----- -----.